

석유사업기금과 管理실태

趙 南 俊 <조선일보 월간조선기자>

옛날 유행가에 「나에게 백만원이 생긴다면...」이라 는 노래가 있다. 하루에 40억원의 수입이 생긴다면 어떨까. 어휴 40억원이란 돈이 어디 누구 애를 씀인가. 꿈같은 얘기지.

그런데 진짜로 하루 40억원씩 벌어들이는 곳이 있다. 밀천 환풍 안들이고 가만히 앉아서 그 큰 돈을 받아채기는 것이다.

석유기금이 바로 그 돈이다. 동력자원부 산하 정부투자기업체인 석유개발공사는 매일 원유가 들어올 때마다 40억원씩의 석유기금을 자동 납부받는다. 예컨대 요즘같은 5개 정유사(油公, 湖南精油, 京仁에너지, 雙龍精油, 極東석유)가 1일 46만~49만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고 있다.

油公은 20만~21만배럴, 湖南精油 18만~20만, 京仁에너지와 雙龍精油가 3만 5천~3만 7천, 極東石油가 9천~9천 3백배럴씩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매일 46만~49만배럴의 원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셈이다.

이 원유가 국내 정유사의 기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원유가 항구에 들어오면 정유회사들은 들어온 원유량에 비례한 석유기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 수입면장과 함께 세관에 신고해야 통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기금이 배럴당 11달러 29센트씩, 1일 원유도입량이 46만~49만배럴이니까 하루에 걷히는 석유기금이 5백19만~5백53만달러(46억~49억원)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석유기금이란 국민들이 석유값을 더 냈으므로 모아진 돈이다. 석유값을 더 내릴 수 있는 그 여분을 흡수해 놓은 것이다. 석유값이 갑자기 오르내릴 때, 그때마다 가격조정을 하기 곤란하니까, 그 돈으로 등락효과를 상쇄시키겠다는 것이 기금제도를 만든 명분이다.

물론 기금만으로 등락효과를 다 커버하지 못하면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로 이어지겠지만.

석유기금제도의 법적 운용근거가 마련된 것은 77년말이었다. 77년초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우리나라의 2대 수입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수출가격을 각각 다르게 책정, 국제원유시장은 가격 2원화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사우디는 아라비안라이트원유를 배럴당 12달러 9센트로 책정하는데 비해 쿠웨이트는 12달러 37센트로 높게 매겼다.

이에 따라 사우디원유를 사오던 湖南精油는 큰 이익을 보게 되는데 비해, 쿠웨이트원유를 들여오던 油公등은 큰 손해를 보게 됐다. 국내 원유가격은 수입가격의 평균에 적정이윤을 붙여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유도입가격 차이에 의해 싼값으로 원유를 도입하는 회사가 폭리를 얻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그 이익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에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국내油価보다 싼값에 원유를 도입하는 회사의 이익을 떼어내어 高價로 도입하는 회사의 손실보전에 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차차 안정기금액이 증가하자 용도별로 기금을

분류했다. 종전처럼 손실보전을 위한 안정기금, 에너지융합리화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기금, 유사시에 대비한 원유비축 사업기금, 석유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개발기금으로 나뉘어졌다. 그것이 지난 4월 또 다시 석유기금으로 통합되긴했지만.

법적 근거는 77년말에 마련됐으나 실제로 기금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79년 10월이후였다. 이란사태를 시발로 시작된 2차 석유위기가 세계를 강타할 무렵이었다.

그러면 석유기금은 도대체 얼마나 걸렸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으며, 남아 있다면 어떤 형태로 남아 있을까. 특히 석유기금의 성격이 석유값 인상분을 축적한 만큼 세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석유기금의 사용내역등을 알 권리가 있다.

79년 10월부터 85년말까지 건철 석유기금 총액은 2조 2천 9백61억원. 이 안에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어진 이자수입도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석유비축기지 건설 및 비축용 석유구입비로 6천 6백70억원을 썼고, 원유도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한 지원 및 국내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정유회사에 지원한 돈이 9천 1백93억원, 에너지합리화 사업지원금 3천 6백45억원, 국내외 석유자원개발에 3백39억원을 사용했다. 그리고 남은 돈이 4천 3백26억원이다.

이 액수는 85년말까지의 금액이고 올해중에 건철 돈이 또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지난 5월29일 안정기금의 액수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도입원유 1배럴당 50센트씩 부과하던 석유기금은 지난 3·29 유가인하시 1달러92센트로 올랐고, 5·29때 9달러4센트로 무려 3백70%나 인상됐다. 국제원유가격이 계속 떨어져 국내油價를 인하해야하는데 유가인하 대신 안정기금으로 인하몹을 흡수키로 한 것이다.

그래서 당초 올해중 1천 5백52억원 정도 건철리라 예상됐던 안정기금은 3·29조치로 1천 4백억원, 5·29조치로 4천 1백억원이 추가로 더 건철 전망이다. 따라서 작년 이월분 4천 3백26억원을 합치면 올해말에 가서 모두 1조 1천 3백76억원의 기금이 모여지게 돼 있는 것이다. 작년 이월분을 뺀 올해 징수분만도 7천50억원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올해말까지 건철 기금총액은 3조원이나 된다. 말이 그렇지 너무나 엄청난 액수라 실감이 나지않을 거액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40억달러에 해당한다. 이

돈이면 우리가 지고 있는 外債의 1할쯤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연말까지 1조 1천 3백76억원의 기금이 모아지려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전제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한다. 한가지라도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국내 원유도입단가가 연말까지 4월말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5·29기금인상조치는 원유도입가격이 배럴당 13달러8센트로 계속된다는 가장아래 취해진 것이다. 원유가격이 올라가면 기금을 인하해야 하므로 예상된 기금조성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하나 국내 원유도입단가가 연말까지 계속 13달러 수준을 지속한다 해도 국내유가는 인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도입가격이 계속 低價를 유지할 때 과연 정책당국이 대량유류소비업체등 국민들의 油價인하압력을 끝까지 견디어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같은 假定들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 국제원유가격은 비성수기(세계기준임)엔 내렸다가 성수기 때 오르는 것이 통례이다. 지난 4월초 배럴당 9달러까지 떨어졌던 원유가는 6월초 14달러 선으로 올라가 있다. 앞으로 더 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6개국 石油相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소비국의 재고가 바닥권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유가를 18달러선으로 가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다. 저유가의 지속은 소비를 증가시키고 신규 석유개발투자를 위축시켜 결국은 원유가인상에 이르게 된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만일 정책당국이 예측한대로 유가가 저시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문제는 또 있다. 기금을 납부하는 국내 정유사들이 자금압박을 이유로 기금징수를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 5사는 정부결정대로 도입단가 하락분을 모두 기금으로 흡수할 경우, 매월 1천억원의 현금을 내야 된다는 점을 들어 징수시기를 3개월 정도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정유사들이 원유를 통관하려면 기금을 먼저 내야 한다. 기금선납제이다. 원유를 보기도 전에 기금부터 납부해야한다. 정유사들이 기금징수시기를 3개월 늦춰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겉으로는 정제한 후, 판매를 거쳐 석유 대전이 들어오는대로 돈을 내겠다는 뜻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현재 기금징수 제도가 잘못돼

● 현재 정유사들이 원유를 통관하려면 기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정유사들이 기금징수시기를 3개월 늦춰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정제후 판매를 거쳐 석유대전이 들어오는 대로 돈을 내겠다는 이유외에 물건(원유)을 보기도 전에 값도 아닌 부대기금을 어떻게 먼저 내느냐는 기금징수제도에 대한 항의가 내포돼 있다●

있으니 고쳐야 한다고 항의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물건을 보기도 전에 값을 치르는 법도 없는 것인데, 하물며 물건값도 아닌 부대기금을 어떻게 먼저 내느냐는 것이다.

이 점은 동력자원부 관계자나 기금관리를 맡고 있는 석유개발공사의 실무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면이다.

따라서 정유회사들의 이 요구는 받아들여질듯 하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석유기금은 통관전에 내야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조항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곧 개정,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조성될 기금은 예상보다 3천억원 정도 모자라게 된다.

제대로 모아지지도 않을 것 같은 불확실한 架空의 숫자를 놓고 정부와 여당사이에, 또 정부부처간에 너도 나도 이 돈을 쓰겠다고 나서고 있는 꼴은 가관이다.

주무부처인 동자부는 애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석유기금을 에너지관련 산업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입장이다. 여당인 민정당은 내년엔 대통령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국회 헌특위의 활동 여하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까지 조기 실시해야 될지도 모른다. 표를 의식해야 할 입장인 민정당은 그돈을 對國民 선심으로 쓰고 싶다.

내년도 선거예산을 짜야 하는 경제기획원은 돈이 궁한 형편이다. 우리나라 예산은 경직성 경비가 많아 융통성을 부릴 여지가 적다. 12대 선거때 민정당 후보자들이 남발(?)한 공약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내년의 3대 선거 까지 점친다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눈길을 돌린 것이 이 엄청난 기금쪽이다. 조단위가 넘는 석유기금, 공무원 연금기금등이 주목표이다.

세금을 더 건자니 국민들 원성이 무섭고, 안건자니 선심공세에 쓸 돈이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계획이 기금의 통합 운영이라는 妙手였다.

이 묘수는 관련부처의 결사적 반대와 고위층의 재고지시로 惡手로 변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재무부는 2천억~3천억원 정도를 통화안정증권과 국공채를 매입하는데 썼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현재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된 流動性 조절에 기여할 수 있고 소화난을 겪고 있는 채권시장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상공부는 또 상공부대로 석유기금을 중소기업 부품산업 試作品 개발, 중소기업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에 한 2천억원쯤 쓰자고 덤벼들고 있다.

이에 대해 동자부관계자들은 각부처의 의견을 일단은 접수하면서도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듯 하다. 3·29 油價 인하때 유가인하발표의 주역을 경제기획원에 빼앗기다시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자부로서는 기본 좋울리가 없다. 아니 유가인상 때도 것처럼 내 일 같이 나서주겠느냐, 유가가 오르면 각 부처가 각축해서 동자부를 도와주겠느냐는 생각에서다.

속마음이야 어떻든 동자부는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5월말 석유사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李鳳瑞 동자부차관)를 열어 기금운용계획을 정했다.

이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우선 1천3백억원을 원유비축에 사용 1천1백만배럴(국내 22일분)어치의 원유를 구입하기로 했다. 애당초 이 원유비축비용은 약 3천만달러로 잡아 놓고 기금을 조성했는데, 원유가 하락으로 비용이 3분의 1로 줄게 됐다. 앞으로 배럴당 12달러가 되면 비어있는 비축시설에 원유를 채워넣을 계획이다.

이 원유비축을 놓고도 부처간에 말들이 많았다. 왜 더 떨어질지도 모를 원유를 공연히 자금부담을 해가며 사서

쟁여놓으려고 하느냐는 의견과, 비축이란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인데 경제성을 따질 수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공급안정 우선이나, 경제성 우선이냐의 논쟁이었다. 그러나 「더 내려가면 사야지」하는 사람과 「더 오르면 팔아야지」하는 사람은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비축이란 경제성보다 공급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12달러선에 사기로 했지만 과연 12달러 시대가 다시 올 것인지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벌써 구입시기를 놓쳤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 에너지절약시설에 2천7백90억원, 비축시설관리에 2백30억원, 국내의 유전개발에 2백2억원, 원유도입선 다변화지원 등에 3백8억원을 쓰기로 했다. 에너지관련 자금외에 韓國電力에 1천7백억원을 저리로 융자, 高利자금과 교체해줄 계획이며, 산업은행이 융자한 하계저탄자금 5백억원을 저리의 기금으로 대체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LNG(액화천연가스)기지 건설자금 5백80억원을 포함, 가스公社에 1천1백16억원을 지원하고, 산업구조조정 및 기술향상 자금으로 필요한 3천8백억원 중 석유기금에서 2천8백억원을 융자해줄 방침이다.

나머지 5백32억원은 여유자금으로 확보, 재정사업 등에 활용키로 했다.

이 계획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고 싶은 민정당에 의해 당정협의과정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재검토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날지 두고 볼 일이다.

자금운용계획이 어떻게 바뀌든지 기금조성의 근본목적이 국제원유가 반등시 국내유가의 인상요인을 흡수시켜 충격을 완화하자는데 있는만큼 자금의 기동성있는 관리 또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을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기동성있는 자금관리. 이 명분 때문에 기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석유개발공사가 금리가 더 높은 다른 저축을 제쳐놓고 현금을 은행에 맡겨놓고 있다고 들린다. 언제든지 써야할 때에 돈을 찾을 수 있게.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관리하는 석유개발공사는 어떤 회사이며, 어떤 형태로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 차례다.

석유개발공사는 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석유소비국을 통타한 석유위기를 겪으며 석유수급源의 안정적 확보가

국민경제의 면에서는 물론,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발족됐다. 78년말 석유개발공사법이 제정, 공포됐고 79년 3월초 발족을 보게 되었다.

석유개발공사 창설의 배경에는 비화가 숨어 있다.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한 민간기업인이 오랫동안 뿌린 씨가 열매를 맺은 것이 석유개발공사이다.

鮮京그룹회장이자 주식회사 油公의 회장인 崔鍾賢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崔회장은 70년대초부터 정유회사를 건설하려는 꿈을 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실력자들과 친교를 맺어 왔다고 한다. 석유위기가 나기 전부터 사우디측 인사들이 韓國을 방문하면 입국에서 출국까지 뒷바라지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급부를 요구한 적이 없어 사우디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줬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석유위기가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中東산유국들로부터 적성국가로 분류되어 원유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정부는 고위관리를 특사로 파견하는 등 애를 썼으나, 면담조차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때 나선 것이 崔회장이었다. 그는 개인적인 친교관계를 통해 우리나라를 석유금수국에서 빼냈을 뿐 아니라 정부베이스라면 원유공급을 늘려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는 것이다. 또 鮮京그룹이 정유사업을 할 경우, 1일 5만배럴의 원유를 주겠다는 언질도 받아냈다고 한다.

그는 귀국하여 故 朴正熙대통령에게 교섭내용을 보고했고 朴대통령은 관계장관을 불러 崔회장의 브리핑을 받고 G-G베이스 원유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G-G베이스 원유를 도입하기 위해 급히 만들어진 것이 석유개발공사였다는 것이다.

그후 석유개발공사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관리를 맡게 됐고, 단순한 원유도입 업무에서 전략상 중요한 비축업무를 맡아 세계적인 규모의 비축기지를 완성해 놓기에 이르렀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서 권장하는 석유비축 물량은 자국소비량의 90일분. 우리나라는 비축기지의 완성으로 민간 정유업체의 자체 비축시설을 합쳐 약 1백일분의 원유를 비축할 수 있게 되었다.

1차 석유위기때 단 하루분의 비축량도 없었고, 2차 석유위기때 1주일 분밖에 없어 말 못할 고생을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今昔之感이 있다.

석유개발공사의 업무중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유전개발사업이 있다.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에 직접 참여도 하

● 일부에서는 돈을 쓰는 기관이 돈을 맡고 있다는 점에 대해 원칙적인 반론을 펴기도 한다. 기업에서도 돈을 관리하는 부서와 돈을 쓰는 부서는 철저히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석유기금이 예산의 6~7%나 되는 현실점에서 기금관리 현실이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고, 유전개발업체에 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융자조건은 成功拂(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안받는 융자) 조건이다.

석유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석유광구는 국내 대륙붕, 北예멘 말리브, 인도네시아 아당광구등이 있다. 또 인도네시아 마두라유전개발업체인 코테코에너지에 1천 6백만달러의 자금을 성공불로 융자해주고 있다.

석유개발공사가 성공불로 융자해 주는 자금은 지금은 석유기금으로 단일화됐지만, 얼마 전까지만해도 석유개발기금이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석유기금은 안정기금, 비축기금, 개발기금으로 나뉘어 있었고 기금마다 각각 관리방법이 달랐다. 안정기금은 순수한 관리만 하다가 정부고시에 따라 사용한다. 비축기금은 관리겸 시설건설과 비축원유구입에 직접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개발기금은 관리겸 성공불 융자재원으로 쓰였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85년말 현재 석유개발공사가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금액이 4천 3백26억원. 4백30만원짜리 소액 예금주 10만명 분의 예금액이다. 앞으로 더 들어올 돈이 7천억원이 넘으니 엄청난 돈을 주무르고 있는 셈이다.

이 돈은 모두 정기예금의 형태로 서울소재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

그동안 이거액의 돈을 둘러싸고 은행간에 얼마나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은행의 예금계수라는 것이 은행의 최고급 비밀로 되어 있어 베일에 싸여있고,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금기사항처럼 돼있어 잘 알려졌는지 않지만 남모르게 피나는 경쟁을 벌여왔다.

하루에 수십억원의 돈이 들어오는 석유개발공사는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해 놓고 있다. 이 돈을 자기은행으로 끌어들이려 각 은행들은 기를 쓰고 뛰어다니지 않을

수 없다.

은행들 간에 이 석유기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혼신의 경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유치비용이 적게 들며, 둘째는 수수료수입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은행은 대출자와 예금자의 차액을 먹고사는 기업이다. 예금을 끌어들이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 4백만원짜리 예금 10만개를 끌어들이려면 상당한 섭외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석유기금은 원샷에 수십억원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유치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대출채원이 된다. 석유기금은 보통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되니까 마음놓고 대출해주고 대출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기금은 정유업체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에 납부한다. 신용장 개설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다. 원유도입은 덩치가 크므로 수수료수입도 짝짤한 편이다.

그래서 너도나도 달려들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일정기간 확실하게 대출할 수 있는 채원이므로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시리 되어 있는 것이다.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도 아니고 한번에 수십억원의 예금이 들어오는 판이니까 은행은 석유개발공사에 꺼벽 죽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이라고 해서 어떤 은행이고 유치경쟁에 뛰어 들 수는 없다. 자격제한이 있는 것이다. 외국환 취급이 가능한 은행이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지방은행등은 아무리 예금을 받고 싶어도 자격이 없어 받지 못한다.

자격이 있는 은행은 상업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등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들이다.

은행중에서 석유기금예금이 가장 많은 은행이 중소기업

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안정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은행이지만 석유개발공사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예금을 해주고 있다. 돈은 다른 은행에서 받지만, 석유개발공사와 약정에 의해 예금이 중소기업은행으로 자동 이체, 입금된다. 특히 에너지융합리화 기금은 전액 중소기업은행이 갖고 있다. 예금액은 약 1천5백억원이다.

시중은행 가운데에서는 제일은행이 가장 많은 예금고를 갖고 있다. 거의 1천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제일은행은 호남정유, 쌍용정유, 正友에너지(현 麗水에너지) 등의 주거래은행. 작년 1년동안 전체기금액의 40%를 취급했다고 한다. 특히 正友에너지와 연계돼 정우에너지가 낸 LPG(액화석유가스) 기금(85년 t당 2백60달러)을 전액 예금받았다고 한다. 작년외에도 거의 매년 제일은행은 기금유치실적에서만 타은행을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왔다.

다음은 한일, 조흥, 상업, 서울신탁은행의 순이다. 은행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은행장이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행동파인 은행의 예금액은 높고, 조용한 성격의 은행은 대체로 예금액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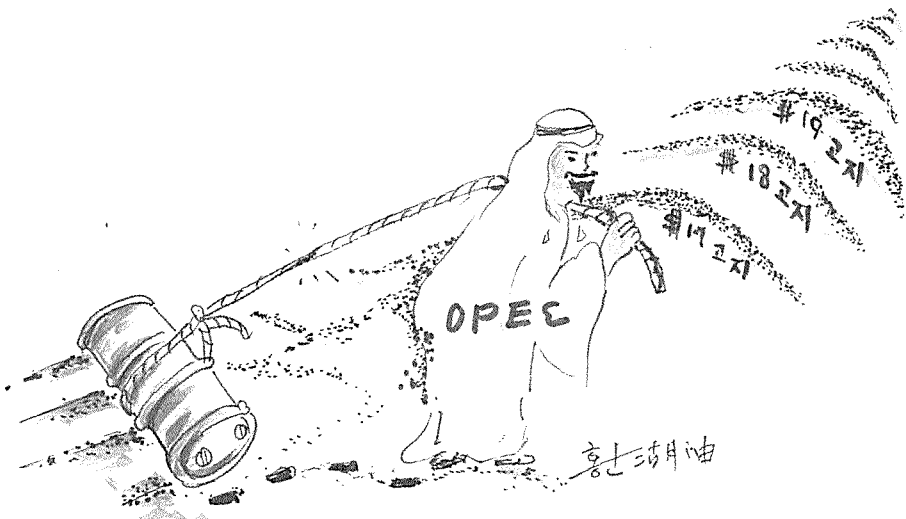
석유기금이 석유개발공사에 맡겨져 관리되어오고 있는 지가 7년이 넘었다. 그동안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말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관리를 잘 해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돈을 쓰는 기관이 돈을 맡고 있다는 점에 대해 원칙적인 반론을 펴기도 한다. 기업에도 돈을 관리하는 부서(예컨대 경리부)와 돈을 쓰는 부서는 철저히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석유기금 규모가 작았을 때라면 몰라도 예산의 6~7%나 되는 현 시점에서는 기금관리 현실이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동자부안에서라도 기금관리만 전문으로 맡는 파트가 생겨 기금관리와 사용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

□ 漫評 □

油價 끌어 올리기 안간힘!



「알라」여, 「몰라」神이여 좀 밀어줘...